

청소년 전문 문화사업단 뜬다

파라미타, 1일 이사회서 확정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청소년 관련 사업과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청소년 교육문화사업단'을 설립한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2차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사업단 설립을 결정했다.

청소년 교육문화사업단은 파라미타 부설기관으로 문화재단과 서울시에서 사회기업으로 등록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사업단장은 상임이사가 당연직으로 맡게 된다.

파라미타는 그동안 사단법인인 관계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없었다. 파라미타는 사업단을 발족해 연합캠프와 해외 문화탐방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중앙사무처 역할에 집중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3년 계획도 결정됐다.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를 슬로건으로 전년대비 35% 증가된 13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됐으며 '청소년 심성개발 프로그램' 연구, 청소년 성장권 서트 및 후원기금 모금 등이 진행된다.

또 주경, 덕조 스님이 이사로, 상임이사에는 현 사무총장인 범경 스님이 선임됐다. 서울 역삼청소년수련관장에는 오산 현암사 주지 현민스님이 선임됐고, 신입 하동청소년수련관장에는 이사인 상인스님이 맡기로 결의했다.

한편 파라미타는 이사회 뒤 2월2-3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청소년명상지도법을 중심으로 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노동위·원탁회의 인수위에 면담 요청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와 종교계 33인 원탁회의가 2월 5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우리 종교인들은 '사랑합니다 함께 삽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행사를 진행했고, 선거 기간에 만난 여야 모두 쌍용차 문제의 국민통합적 해결이 절박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지난 12월10일 김무성 총괄본부장 등 새누리당 선대본 관계자들은 5대 종단 종교인들과 만나 노사과 정부, 종교계 테이블 구성, 국정조사 등을 약속했다.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日 도난 불상 왜구가 약탈”

불교계 한 목소리... 1996년 부석사 환수운동 사실도 드러나

일본에서 도난 당한 뒤 한국에 반입된 불상들이 왜구들에 의해 약탈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88년 관음보살좌상의 존재를 국내 학계에 최초로 알린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는 서산문화발전연구원원이 발행하는 <서산문화춘추> 제8집에 투고한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의의와 왜구에 의한 대마도로의 유출' 논문 통해 약탈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명대 교수는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상은 1330년 영원토록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 보살상은 1370년 전후



2월 4일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님 제자리모시기 추진위원회는 문화재청을 방문해 관음보살좌상 부석사 반환을 촉구했다.

부석사, 환수위 구성해 대응
수덕사도 관음좌상 환수 주장
문명대 교수 약탈 가능성 제기

서산을 다섯 차례 이상 집합했던 왜구들이 약탈해서 대마도 관음사에 봉안됐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복장물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불상을 다른 사찰에 전할 때는 이안하는 내용을 복장물에 넣는 것이 상식"이라며 "조성기를 비롯한 복장물에 대마도 관음사로 이안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반입된 관음보살좌상에 대해 수덕사를 비롯한 불교계는 부석사로 불상이 돌아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산 부석사 신도회로 구성된 '금동관세음보살님 제자리모시기 추진위원회'는 2월 4일 대전 문화재청을 방문해 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는 성명을 전달하고 관음보살좌상을 친견했다.

예산 수덕사(주지 지운)도 2월 5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에 반입된 관음보살좌상이 서산 부석사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덕사는 1996년 부석사와 지역불교계가 일본에서 이 불상에 대한 환수 운동을 펼친 사실을 공개했다.

수덕사는 "당시 부석사 주지 도광 스님과 부남진목회, 서산문화발전연구원 회원들이 관음보살좌상이 일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후쿠오카 공보실을 방문해 불상의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며 "일본 관음사에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수덕사는 정부가 이번 불상의 반환 문제의 해결에 불교계의 환수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월 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부석사 관음보살좌상과 동조여래입상 등 불상 2점에 관한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기간동안 전문적인 학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내 불상 전문가와 불교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환 경로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東大 총동창회·종관위 갈등 심화

정관 개정 반대 VS 감사권 발동 시사

동국대 재가 이사 선임을 놓고 벌어진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이연택)는 동국대 정관 개정 요구는 사학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고, 조계종 총림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경, 이하 종관위)는 학교에 대한 감사권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2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종이 요구한 동국대의 이사 추천 정관 개정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동창회 측은 "총림학교관리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 재가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관행을 끊어 내야 한다. 관행으로 이사를 선출하다보니 마련돼 있는 정관을 지킬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현재 동국대 재가이사에 대한 선출 조항은 없다. 다만 '조계종 재적 승려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종관위는 '재적 승려 이사 및 감사'를 '이사 및 감사'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총동창회 측은 사학법에 보장된 개방형 이사까지 종단에서 관여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총동창회는 "정관을 개정하게 되면 모든 이사진을 종단에서 추천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학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가 이사는 이사회에서 자체 선

출을 하거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관위는 이 같은 총동창회의 행보에 적극적 대응에 들어갔다. 종관위는 현재 설 명절 직후인 2월 14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사 선출을 지연 중인 동국대 학교법인과 사실을 왜곡하는 총동창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으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국대 감사권과 이사회에 총동창회를 배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1월 31일에는 "동국대 이사 선임은 '총림학교관리위원회' 추천과 '중앙총회' 동의를 거쳐 동국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다"며 사실을 호도한 총동창회에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천은사 관람료 징수에 제동 걸려

광주고법, 경내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 내려

법원이 사찰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해왔다며 지리산 천은사(주지 연관)에 대해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도로에 포함된 사찰 사유재산 및 도로관리 책임은 묻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 1부는 2월 6일 강모 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고도 차량 통행을 위해 문화재 관람료 1600원을 낸 강씨 등에게 천은사가 1600원에 위자료 10만 원을 더해 지급하도록 했으며 천은사가 사찰 경내를 통과하는 지방도 861호선을 통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잘못 된 행위라며 항후 위반시 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 등은 2010년 12월 지리산 국립공원의 지방도 861호선을 지나면서 천은사

의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1600원을 낸 뒤 부당함을 주장하며 천은사와 도로관리청인 전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등 액수는 원심과 같지만 항소심에서는 사찰 경내로 도로를 지나게 한 전남도의 공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로 중 일부 부지가 천은사 소유라고 해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문화재 관람과 상관없는 운전자들에게까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판시했다.

또 "천은사는 2000년 관련 소송에서 지고도 도로 통행자가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대표소 앞 통행을 방해했다"며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만 교통방해 등으로 60건의 112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해 또 위반하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복지 위해서라면 종교인도 세금 납부”

자승 스님, 5일 문용린 교육감 예방서 밝혀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열망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라면 종교인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두 번째 긍정적 의견이다.

자승 스님은 2월 5일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무상급식에 대해 문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한 학년당 8000억 원

가량의 재원 필요하다. 무상급식은 좋은 제도이지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당장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 종교인 역시 이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문 교육감은 "아이들의 정서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명상이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다. 교육 차원에서 명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5일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17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0주 베스트셀러 1위

개정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불과 이론 대성자의 경천동지할 대사자후!!
우주 탄생과 영혼체의 비밀에 대한 초유의 선언!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출판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출판 운주사 T. (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인간의 탄생 - 우주 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만고의 비밀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철학·종교서!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김수·자재 만현 크스님 글·법장 김중섭

달라이 라마 Dalai-Lama XIV의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 이 시대 인류가 읽어야 할 양서!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715쪽 | 값25,000원